

필요광장

모두를 위한 도시공원 개발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얼마 전까지 코로나19의 발병률과 확산세가 거의 멈춘 가운데 통제가 가능할 정도로 확실히 K방역이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위상과 함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섰던 중, 순간의 방심으로 수도권 등이 현재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는 등 분위기가 갑자기 변하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개인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사태가 커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다. 책임져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러나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한 개인이나 단체, 회사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의 실현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주에서는 인공지능(AI) 집적 단지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남구의 백운동 고가도로 철거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도심 곳곳에 공동주택단지가 건설되고 양동과 같은 도시 재생사업 지역에는 새로운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도심과 외곽 지역을 막론하고 다양한 개발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정제되었던 도시가 활력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관점과 무분별한 개발이 아닐까 하는 걱정스러움이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어렵겠지만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이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신문에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칼럼을 보았다. 앞에서 말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환경,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광주의 인구, 우리나라 내외부 상황에 따라 나빠지는 대기 환경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환경 문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더욱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린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주거단지가 각광받고 있다. 과거 역세권과 학세권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때와 달리 공원·숲 등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여기에 근무시간 단축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바쁜 일상 속, 집 근처에서 휴식을 찾는 힐링족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높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주거 쾌적성을 최우선 순위로 선택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숲이나 자연환경이 가까이 있는 주거 공간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도심 속 공원을 끼고 있는 주거단지는 그 희소성에 더해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시 공원일몰제 시행(오는 7월 1일)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시는 25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진행하였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지금도 공원 소유주들의 반발

과 고분양가나 세대수 상승 등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광주시와 시민들이 합의 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공원 내 아파트 등을 짓는 비공원 시설 면적이 전국 평균(약 21%)보다 낮은 9.7%라고 강조한다. 민간 사업자의 이행 보증을 위해 토지 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 이행 보증금으로 담보 설정했고, 사업 완료 후 정산에서 애초 제안 수익을 초과하면 그만큼 공원 사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협약도 이뤄졌다고 한다.

어떤 사업이든 관계자 모두의 마음을 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광주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광주시와 사업 시행자가 윈윈한 해결을 이루어 민간공원 사업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원에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을 위하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좀 더 나은 환경의 공원을, 그래서 광주다운 명품 공원을 만들었으면 한다.

2040 광주 도시계획 이렇게

시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도시의 과제들



조진상 대한국도도시계획학회 회원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됐다.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된 이 도서관에 대해 시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고 한다. 소요된 건축비의 3분의 2를 시민 모금에 의해 조달했는데, 도서관이 들어서자 그 시민들이 당시 시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 성공 스토리는 이제 '기적의 놀이터'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미래 모습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마스터 플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스터 플랜이 그렇듯이 ▲필요 이상의 과잉 계획 ▲시민의 의사나 삶의 질 향상과는 별 상관없는 개발 위주 계획 ▲재원 조달 가능성, 행정의 추진 의지 등 실현 가능성을 크게 따지지 않는 백화점식 계획 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목표 기간 자체가 20년 장기일 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 착수에 서약료까지 수년이 걸리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캐비닛 속에 의견을 받아들이던 전과로 하나 밖에 없는 묵옥탕으로 만들었다. 이 묵옥탕은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에 힘입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지난 2003년 순천에 전국 최초로 '기적의 도서관'이 건립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단점들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백화점식으로 계획을 나열하기보다는 현안 이슈 중심의 대안 검토와 논의가 담겨 있었으면 한다. 지난해 17년을 끌어온 도시철도 2호선 건립 여부 문제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이 난 바 있다. 올해 6월 말에 시한인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 확보와 민간공원 도입 등의 이슈들도 도시공원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서 결론을 지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안건들은 광주 도시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지만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어떤 가치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한정된 계획 수립 기간과 예산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해진 계획 수립 기간 동안에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정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시민이 도시를 알아가는 시민 학습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후일 해법을 찾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 이슈들을 추려보면 ▲고층 아파트 위주 주택 건설 ▲상업 지역내 초고층 아파트 건설 ▲무등산, 영산강 등 주요 조망 및 경관의 개선 ▲구도심 쇠퇴와 도시 재생의 방향 ▲광주역 준지와 이전 ▲폭염이나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생태도시 만들기 ▲생활 속 주민 체험형 문화복지 복합시설 건립 등이 있다. 이런 각종 현안들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방향이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요 지역 이슈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요구나 의견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전개돼야 한다. 설명회, 토론회, 보고회 등의 전통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SNS 활용, 현장 포럼, 관계자 합동 워크숍, 타운홀 시민 미팅, 100인 전문가 포럼, 1000인 시민포럼, 일반 시민 열린 플랫폼 운영 등 다양한 시민 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시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참여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주제가 깊게 고민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기고

아이에게는 가족이 가장 좋은 울타리입니다



박혜지 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 선임상담원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은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2019)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요보호아동 발생 사유를 분석한 결과 학대 34.9%, 미혼 부모 아동 20.6%, 이혼 18.3%로, 부모의 학대나 이혼, 미혼 부모의 양육 어려움으로 위기에 놓인 아동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이처럼 안정적 돌봄 환경에서 이탈된 아동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되었고, 그중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근거하여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위탁 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이다. 광주권에서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350여 명으로, 유형은 대리양육 가정위탁(조부모에 의한 돌봄), 친인척 가정위탁(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 보호), 일반 가정위탁(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나뉜다.

부모와 분리되어 조부모 또는 친인척과 살거나, 혹은 양육시설과 같이 공공복지 체계 내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예전부

터 존재해 왔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2003년부터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실시하여, 아동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인 '친부모'의 안정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구성원 간 상호작용의 질과 양이 인위적인 집단생활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위탁 부모를 모집하는 조건 중 '가정 내 위탁 아동을 포함하여 아동 수가 4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이 기준이 아동의 가정 보호가 지향하는 바를 말해준다. 유아동기 시절에 보호자와 안정적 애착과 유대를 형성하는 것은, 그 아이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때로는 불안정한 상태의 친부모보다 안정된 양육이 가능한 다른 보호자가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과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아이들이 생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위험한 환경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과 희망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친부모의 불안정한 양육 태도나 기능이 아동 돌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에, 친부모가 부모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아동을 다른 가정에 배치함으로써 아동과 친부모 모두를 구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센터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놓인 아동에게 안정적 돌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예비 위탁 부모의 충분한 확보다. 소득 및 건강 상황이 아동을 기우기에 적합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위탁 보호에 동의한다면 위탁 부모 신청이 가능하며, 소정의 교육과 가정 조사를 마친 후 위탁이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게 된다.

지난 5월 22일은 국가가 지정한 '가정위탁의 날'이었다. 22일의 의미는 친가정과 위탁 가정 2개의 가정이, 친자녀와 위탁 아동 2명의 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는 뜻이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고, 가족 위기에 놓인 아동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분들의 위탁 부모 참여를 부탁드린다.

社說

급증하는 청소년 강력 범죄 대책 마련을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어 걱정이다. 범죄의 유형도 절도나 집단 폭행은 물론 성폭력이나 살인 등으로 다양해지고 어른들 못지않게 흉포화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를 저질러 붙잡힌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은 1536명에 이른다. 특히 강도 혐의로 검거된 소년범은 27명으로 전년(9명)보다 세 배나 늘었고 살인 혐의로 붙잡힌 10대도 세 명이 나왔다. 올 들어서도 10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까지 5대 범죄로 검거된 소년범은 5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8명)보다 11.9% 늘었다. 특히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18명으로 전년(12명)보다 50% 증가했다.

범죄 양상과 수법도 갈수록 흉포화·지능화되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은 최근 같은 학교 여학생을 마구 때리고 폭행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공동 폭행)로 C(14) 양

등 중학교 3학년생 두 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데, 이들이 올린 영상에는 피해자를 때리며 조롱하고 웃는 모습이 담겼다. 재미삼아 게임을 하듯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가 하면,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피해자가 숨진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10대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와 교육부도 형사 미성년 연령 하향을 추진 중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재의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처벌 수위를 높일 경우 경각심을 주어 강력 범죄와 재범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문제를 상담·치료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법무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오늘 출범 통합당 비대위 보수 혁신 나서야

미래통합당 쇄신을 책임질 김종인 비대위가 오늘 출범한다. 김 위원장은 청년 3명과 여성 2명을 전진 배치한 9인의 비대위 구성을 지난 27일 완료한 데 이어 28일에는 당 사무총장을 수도권 재선 출신 원외 인사로 앉히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김종인 비대위는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어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앞으로의 비대위 운영 방향을 비롯해서 어떤 당 쇄신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비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을 초점을 맞춰 '경제 비대위'로 스스로의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을 중시하는 김 위원장의 기조에 따라 시장 중심 자율 경제나 성장 중심의 기존 통합당 경제 정책 대신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 등을 마련, 탈(脫) 보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기도 한다.

돌아보면 지난주 21대 총선 통합당 당선자 다수가 김종인 비대위 임기 연장을 표결로 추진한 것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통합당을 살릴 뾰족한 방도가 달리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 비대위는 강도 높은 혁신에 나서야 한다. 특히 통합당이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은 이유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지금은 보수 언론조차 통합당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다며 따뜻한 보수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으로 환골탈태해야만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혹 김 위원장이 개혁은 뒷전인 체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 다지려 든다면 비대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번 비대위는 통합당이 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無等鼓

'헤어졌다가 모이고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이 반복되는' 이합집산(離合集散).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회자정리(會者定離). 이러한 고사성어가 동양적인 사고를 반영한 것인데 비해 비슷한 의미로 '분열, 분파'를 뜻하는 시즘(Schism)은 서양적 사고방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합집산이나 회자정리가 사건이나 현상의 복잡함 면면을 최대한 단순화해 '보편적인 모습'으로 일반화한 것이라고 한다면, 시즘이란 단어는 그 현상으로 인한 심감하게 된다. 물론 진심(眞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낸 것이라 보는 느낌이었어사다.

모래성

하지만 동양에서건 서양에서건 이런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아무리 강력하고 친밀한 집단이라도 결국엔 나뉘고 헤어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다. 과학적으로도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엔트로피의 법칙이 입증된 상태다. 최근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국회의원 간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그동안 위안부 운동을 대표해 왔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소수 또는 특정 지도자가 이끄는 단체가 신념이나 관행 혹은 권위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두 개의 이상의 단체로 나뉘는 '시즘' 즉 분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직 나만이, 우리 단체만이 자각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의연의 '신념'이 실제 피해자 이익을 위한 현상의 복잡함 면면을 최대한 단순화해 '보편적인 모습'으로 일반화한 것이라고 한다면, 시즘이란 단어는 그 현상으로 인한 심감하게 된다. 물론 진심(眞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낸 것이라 보는 느낌이었어사다.

정의연이 아니어야 한다'는 데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1990년 11월 발족한 이래 30년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공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의연이 분열의 위기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 새롭게 앞으로 나아갈 원 간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그동안 위안부 운동을 대표해 왔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어떤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G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publication details such as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information.